

이 대통령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상생기금 1조 적립”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사업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과 관련해 국재통상질서 격변기에 전략적 대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대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000억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 것과 관련해

“농지 전용해 태양광 사업하면 몇배의 소득” 검토 주문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커…원점서 다시 대화를”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텐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정부의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묵하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기본소득 관련 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후 10개 군의 인구가 5% 가량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건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담당 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서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앵보

김병내 남구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227개 시·군·구 목소리 낸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자격…중앙-기초정부 ‘국정파트너’
현장해법 국가정책 연결…소통창구 마련 자치분권 강화 기대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이 국무회의에 기초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에 따르면 김병내 대표 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의 목소리를 전달할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협의회 대표회장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시군구들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민선자치 30년 출발에 맞추어 확실히 달라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식 소통 체계가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전국 227개 시·군·구의 현장 의견을 국무회의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복지와 돌봄, 지역경제, 인구감소,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당수 정책이 기초지방정부에서 집행

되는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 국무회의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2명의 단체장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평호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청년위원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평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선언

“청년 목소리를 민주당 변화로”

정평호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청년위원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전국 각지 14개 시·도당의 전 청년위원장들도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 온 정평호 출마예정자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평호 출마 예정자는 출마선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민주당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면서 “12·3 내란과 탄핵, 조기 대선,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친 지난 2년간 거리와 광장에서 전국의 청년 당원들이 보여준 함께 버티는 힘, 연대의 지력을 청년 당원의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출마예정자는 민주당 광주시장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광주선대위 2030본부장과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정 출마예정자는 “민주당의 뿌리

인 전남광주에서 배운 민주당의 정신과 현장에서 듣고 배운 경험을 전국청년위원회에 전부 쏟아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국청년위원회를 ‘현장의 청년과 당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 당원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그 경험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지게 하는 ‘블루패스’를 추진하고, 민주당 제2당사 추진단 부단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카페 등 유흥공간에서 청년을 만나는 ‘청년동네당사’를 사범 운영하고, 전국 시·도당에는 ‘청년민주당 팝업스토어’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청년 당원의 결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청년당원총회를 정례화하고, 가용 사업예산의 20% 이상을 청년 당원의 제안 사업에 배정하는 ‘청년당원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 출마예정자는 “지금까지 약속한 공약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원들에게 직접 평가받겠다”고 약속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안도길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 제안

경제 대반등 이뤘으나 청년층 자산형성 사다리 붕괴

이형일 부총리 “공감한다…세부 시행방안 검토할 것”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사진)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를 조명하면서 그 이면의 청년층 자산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물량 확대와 단가 급등 등 교역 조건의 전반적 개선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이 4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경제의 터널을 지나, 금년 2분기 투자는 4.3%, 내수는 2.4% 증가해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탄탄한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97.3조원에 달하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딛고, 금년 88.4조원의 초과 세수로 재정 체질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나아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0년 만에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3.3%p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의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심각한 양극화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



적했다. 청년 가구당 순자산은 2022년 2.6억원에서 2025년 2.1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득 및 순자산 모두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 가구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부동산 승계 여부, 대·중소기업 간 보수 및 특별급여 격차 심화, 대기업 중심의 주식형 보상 제도 편중 등이 맞물리며 ‘자산 형성 사다리 단절’이 고착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를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하여 공동 적립한다.

이 재원을 ETF, 우량주, 주식형 펀드 등 장기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분산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한다.

안 의원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